

# 국회 기록관리 체제정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System Improvement of the National Assembly Record Management

서 연 주 (Yeon-Ju Suh) \*\*

양 승 민 (Seung-Min Yang) \*\*\*

### 초 록

국회 기록관리는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의 기록업무 이용제공과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보존업무가 분산 추진되어 기록관리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또 올 하반기에 입법조사처의 신설이 예정되고 장기적으로 국회통합전산센터의 운영방안이 도출되어 국회 정보화의 정책이 크게 수정되고 있다.

국회는 국회 정보화와 관련하여 국회 전산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향을 한국전자정부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연구결과 네 가지 전산센터 운영방안을 제시받았다.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이 제시한 네 가지 전산센터 운영방안을 토대로 국회 기록관리 체제방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였다. 국회기록관리체제정비 방안은 국회기록보존소 위상과 관련하여 고려하였다.

### ABSTRACT

The archive management system for the National Assembly is divided into two ways and propelled by each of them: one is providing the service for the recording purpose by the legislation data processing office and the other is the archiving service by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In this context, a clear analysis is much required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archive management system. Also, with the legislation research bureau scheduled to be organized newly, the data processing policy for the National Assembly is being largely modified as the operation plan for the joint computerization center of the National Assembly came out.

In relation to the data processing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Assembly has requested the research outsourcing to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Electronic Government and had the four possible operation plan of the computerization center as a result. On the basis of four alternatives proposed by the Korean Research Institute of Electronic Government, the Assembly has sought out the desirable way for the archive system of the Assembly. The st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Archives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finding out the solution for improving the data management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키워드: 국회 기록물, 국회기록보존소, 통합전산센터, 국회입법조사처, 기록관리,  
national assembly, national assembly archive, record-management

\* 본 연구는 숭실대학교 교내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음.

\*\* 국회도서관 전산주사, 숭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박사과정. (yjsuh@nanet.go.kr)

\*\*\* 숭실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yang@computing.ssu.ac.kr)

■ 논문접수일자 : 2005년 8월 20일

■ 게재확정일자 : 2005년 9월 14일

## 1. 서론

### 1. 1. 연구의의

국회는 법원·헌법재판소와 함께 특수기록물관리기관으로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0년에 국회사무처 소속하에 국회기록보존소를 신설하고 국회기록물등록관리시스템과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문서기안을 전자문서로 하는 신전자문서시스템이 2004년에 시행되었다.

국회기록물관리시스템은 올해 시스템 개선점을 파악하고 내년에 재개발 예정으로 있다. 작년에 시행한 신전자문서시스템과 내년에 개발될 국회기록물관리시스템에 개선점이 있지만 행정부 주요기관 기록관리 실태와 비교하면 국회기록관리는 법률규정을 준수하며 기록물을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기록보존소는 국회에서 생산되는 모든 기록물을 보존·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정보화는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이 주관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회기록물이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을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국회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입법정보화담당관실과 국회기록보존소의 명확한 업무분석과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이처럼 명확한 역할 정의가 필요한 때 국회 안에서는 국회정보화와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역할 변화가 일고 있다. 하나는 9월 정기국회에 국회조직법이 통과된 후 신설하게 될 국회입법조사처의 등장이고, 또 하나는 참여정부 들어 본격 논의되고 있는 행정부의 범정부통합전산센터가 국회통합전산센터로 이어져 국회 각 기관으로 흩어

져 있는 전산실을 한곳에 통합하는 국회통합전산센터가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현재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 3개 기관이 있으며, 각 기관마다 전산실을 갖고 있다.

국회정보화와 관련된 역할변화에 국회기록보존소가 어떻게 자리매김 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다. 국회는 통합전산센터와 입법조사처의 신설을 고려하여 한국전자정부연구원에 전산센터 운영방향 연구용역을 맡겼고 그 결과가 나온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회 기록관리 실태를 알아보고,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의 국회 전산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향 용역결과에 따라 국회기록관리 체제 정비방안에 대해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국회기록관리 체제정비방안은 국회기록보존소의 위상과 관련하여 고려하였다.

### 1. 2. 연구범위

본 연구는 행정부 주요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알아보고 국가 공공기록관리로써 국회기록관리를 분석하였다. 또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의 국회 전산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 용역결과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국회기록관리 체제 정비방안을 검토하였다.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의 용역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회입법조사처 신설과 국회통합전산센터를 예상하고 국회정보화와 관련하여 한국전자정부 연구원은 네 가지 전산센터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제1안은 각 기관별로 별도의 전산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고, 제2안은 국회 내 통합전산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다. 제3안은 국회 내 이원화된 전산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중 ‘2+2방안’으로

국회도서관과 입법조사처를 지원하는 전산센터와 국회사무처와 예산정책처를 지원하는 전산센터로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제4안은 제3안과 같이 국회 내 이원화된 전산센터를 운영하는 방안 중 '3+1방안'으로 국회도서관을 지원하는 전산센터와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지원하는 전산센터로 이원화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의 국회 전산센터 네 가지 운영방안을 토대로 각각의 방안에 따라 국회 기록관리 체제정비 방안을 국회 기록보존소 위상과 관련하여 고려하였다. 국회 각 기관의 독립과 통합정도에 따라 국회기록보존소의 독립과 통합을 분석하고, 독립된 국회 기관에는 자료관을 두어 국회 기록물 수집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였다. 또 국회기록보존소의 현재 3급기관인 위상으로 기록물 정책 수립과 시행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개선해야 할 점을 분석하였다.

## 2. 행정부와 국회 기록관리 실태

본 장에서는 국가기록원이 행정부 주요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분석하여 행정부의 기록물 관리 현황을 알아보고 국회 기록관리 실태를 알아본 후 국회 기록관리 현황도 분석하였다.

### 2.1 행정부 주요기관 기록관리

#### 2.1.1 국가기록원 실태조사

국가기록원의 행정부 주요기관의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언론의 공공기록물 관리의 문제점 집중보도를 계기로 하게 된 것으로 2004년 6~7월 2달에 걸쳐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료관 설치현황		자료관 인력현황	자료관 운영규정
	설치부서	설치일자		
기획예산처	04. 4 자료관 기본계획 수립 04.12 각 부처 공동예산으로 완료		총무과 1인, 정보화 담당관실 1인	자료관 시스템 구축후 제정 계획
감사원	총무과	01.2	감사관, 감사주사, 사서서기	01.2 수립
재정경제부		05년 계획	별정7급 1인	미수립
대검찰청	총무과, 문서고를 자료관으로 전환	04.1	기능직 1인	검토중
건설교통부	총무과	04.12		04.12
식약청	서무계	05년 계획	위생주사1, 전산주사1, 기능직3인	제정중
노동부		04	총무과 1, 정보화추진단 1인	
환경부	서무계		서무계장 겸임, 6급, 기능직겸임	미제정
외교통상부	외교사료과	05년 계획	사서7인, 기능1인	05년 계획
정보통신부	서무계	예산 및 공간공관	6급 1인	미제정
행정자치부	총무과	설치장소 요청중	별정9급 1인	미제정
서울중앙지검	총무과	04.1	3급,6급,9급 1인, 8급 2인	대검에서 운영지침 준비중

### 2.1.2 국가기록원 실태조사 분석

행정부 주요기관의 기록관리 실태를 분석한 결과 언론과 시민단체의 많은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록관리의 중요성마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관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며, 자료관이 설치되었더라도 기존의 문서고를 자료관으로 문폐만 바꾸어 단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 기록물관리담당인력의 현황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록물관리 업무가 총무과의 서무 추가업무로 되어있는 것은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무시한 행태라 할 수 있다.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배치된다고 해도 전문요원들이 기록관리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기 보다는 행정잡무를 주로 수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

이처럼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실태가 심각한데도 개선의 여지가 없으며, 기록관리의 중요성의 인식도 매우 낮은 것은 기록물의 무단파기나 훼손, 은닉, 유출과 같이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면 기록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이관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록관리법의 의무조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이를 강제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어야 하고 국가기록원이 주무부처보다 최소한 동급기관이나 상급기관으로 개선하는 것이 국가기록원이 기록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 2. 2 국회 기록관리

### 2.2.1 국회 기록관리 실태

국회는 “공공기관의 기록관리에 관한 법률”규

정에 따라 2000년에 국회기록보존소를 신설하고 처리과용으로 국회기록물등록관리시스템을, 국회기록보존소용으로 기록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또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회기록물등록관리시스템을 흡수·통합하여 신전자문서시스템을 2004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기록관리 중요성이 대두되기 이전부터 국회는 국회주요 기록물중 국회의회의록과 법률의안을 오래기간 보존하기 위해 라미네이팅을 해오고 있었다. 이런 기록관리를 위한 수작업을 포함하여 개발되었던 기록물관리시스템은 내년에 문서기안을 전자문서로 하는 신전자문서시스템과 연결하여 재개발 예정에 있다.

### 2.2.2 국회 기록관리 실태분석

국가기록원의 행정부 주요기관 기록물 관리 실태조사를 보면 행정부 내 기록관리 실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국회는 법률규정에 따라 기록관리기관을 신설하고 기록관리시스템을 갖추고 기록관리를 해오고 있다. 행정부에 비하여 기록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제대로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국회기록물도 기록물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식이 부족하여 국회내 기록물 관리범위가 매우 협소하여 중요 기록물을 수집조차 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 국회기록보존소가 국회사무처 소속하에 제한적으로 두고 있어 국회도서관과 예산정책처, 신설예정인 입법조사처의 기록물이 관리되지 않고 각 기관마다 주요자료를 자체 백업하는 수준에 있다. 따라서 입법조사처의 신설과 국회내 기관들 간 전산실을 통합하는 통합전산센터의 태동을 앞두고 국회기록보존소의 위상을 재고려하고

국회기록물 관리를 재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하의 장에서 국회 기록관리 체제정비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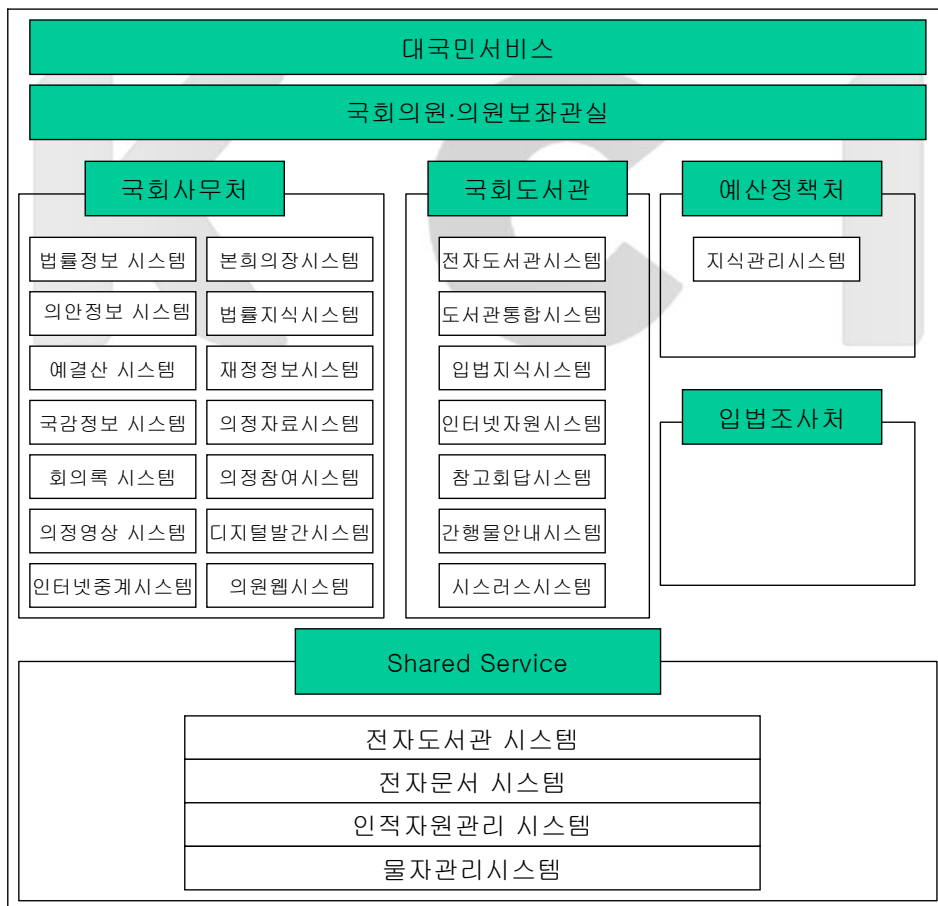
대로 국회기록관리 체제정비 방안을 알아보려고 한다.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은 국회 전산센터 운영 방안으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하였고 이 네 가지 전산센터 운영방안에 따라 국회 기록물 체제정비 방안을 제시하였다.

### 3. 국회기록관리 체제정비 방안

본 장에서는 국회시스템 현황을 알아보고 새로 신설 예정인 국회입법조사처와 통합전산센터를 예상하여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

#### 3.1 국회시스템 현황

국회 전산화는 1978년 국회사무처 내 도서관(국회도서관 전신)에 국회도서관 업무 자동화를



〈그림 1〉 국회전산시스템구성현황

위해 “국회도서관업무전산화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정기간행물기사색인 시스템 개발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 후 국회도서관이 국회사무처로부터 1988년 12월 29일에 분리·독립될 때 전산실은 국회도서관으로 이관이 되었다. 국회도서관 전산실은 1996년 국회사무처에 전산 전담부서가 설치되기 이전까지 국회 내 모든 주요 업무 시스템 개발을 수행하였다.

국회사무처는 1996년 국회사무처 내 전산실을 만들면서 독자적인 전산시스템 개발을 시작하였다. 2004년에는 행정부의 방대한 예산 결산을 견제하기 위한 국회예산정책처가 신설되고 국회예산정책처내 전산실이 만들어짐으로 각 기관이 독립 발전할 때마다 국회 내 전산실이 분리·독립하게 되었다. 현재 국회 내 전산실은 국회사무처, 국회도서관, 국회예산정책처로 각각 나누어 존재하고 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의 의회조사국(CRS)와 같은 기구로 정책중심으로 입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신설되는 기관으로 차관급인 처장 1인을 포함해서 100명 안팎으로 “국회예산정책처”와 같은 규모와 형태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설될 예정인 입법조사처를 포함하여 국회 내 전산시스템 구성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국회정보화는 각 기관 필요에 따라 전산실이 신설되고 시스템이 구축되었다. 그러나 통합전산센터가 효율성 극대화로 정보화 대세가 되면서 국회도 통합전산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 3. 2 국회 기록관리 체제정비 방안

#### 3.2.1 국회 전산센터 운영방안

국회 내 전산시스템은 사무처, 도서관, 예산

책처등으로 분산되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입법조사처의 신설이 예정되고 국회전산통합센터의 장기적 운영방안이 도출되어 국회는 한국전자정부연구원에 국회 전산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용역을 맡겼다.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의 연구결과 네 가지의 국회 전산센터 운영방안을 제시하였고, 네 가지 방안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를 분석하여 현시점에서는 4안:1+3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라 판단하였다.

합리적으로 판단한 1+3방안은 국회통합전산센터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최종적으로는 국회 각기관내 전산실이 하나로 통합하는 2안을 최종 목표로 제시하였다.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이 제시한 국회 전산센터 운영방안 네 가지는 다음과 같다.

- 제1안: 각 기관별 별도 전산센터 운영 방안
- 제2안: 국회 전체 통합전산센터 운영 방안
- 제3안: 국회 이원화 전산센터 운영 방안 중 2+2방안(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국회입법조사처)
- 제4안: 국회 이원화 전산센터 운영 방안 중 1+3방안(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이 제시한 국회 전산센터 네 가지 운영방안을 가정하고 국회기록관리 체제 방안 중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

#### 3.2.2 각 기관별 별도 전산센터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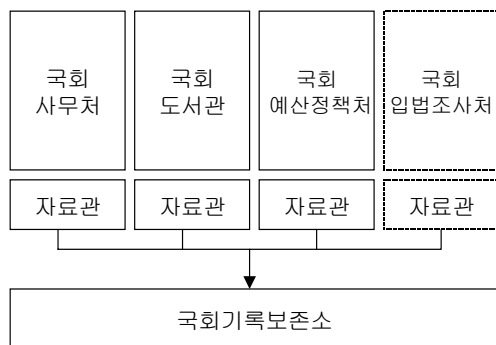
각 기관별로 별도 전산센터가 운영된다면 단순한 공문서의 기록보존이 아니라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의 방대하고 질 높은 데이터베이스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예산·결산에 관한 분석자료, 신설 예정인 국회입법조사처의 높은 수준의 입법

정책 분석물들을 국회기록물관리시스템이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국회 각 기관마다 자료관을 두고 생산되는 중요자료를 다 기록물로 남겨야하며 모든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의 최종적인 종착에는 국회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연결되고 그 자료의 보관을 국회기록보존소에서 해야 한다.

국회도서관의 경우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저장매체 미디어에 저장을 한 후 1년에 두 차례 제주대학에 백업을 하고 있다. 국회도서관 처럼 국회 내 각 기관마다 생산되는 중요한 기록물을 자체적으로 백업하고 있는 실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기관과 그 기관에서 생산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국회기록보존소가 보존관리 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회기록보존소가 지금과 같이 국회사무처 내에 존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회기록보존소가 독립적인 기관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 내 각 기관의 전산실이 통합되지 않고 국회입법조사처가 신설한 후 국회기록보존소를 통한 기록관리 체제 정비 방안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 각 기관별 전산센터 운영 시 기록관리 체제정비 방안

다시 정리하면 각 기관마다 전산실이 존재하고 신설될 입법조사처도 전산실이 개별로 존재한다면 각 기관의 최종기록물과 국회기록보존소가 연결될 수 있도록 국회기록보존소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기관이 되어야 하며,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최종기록물을 각 기관에 자료관을 통해 수집하고 기록물관리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국회의 중요한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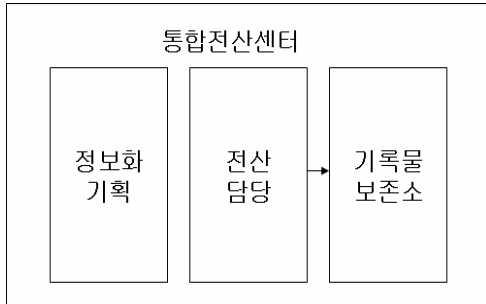
### 3.2.3 국회 내 통합전산센터 운영 방안

국회 통합전산센터는 장비통합면에서 중복서버를 제거하고 전산실 공간문제를 한 곳에 집결시키므로 전산실 냉방시설을 비롯한 항온 항습시설과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장비 절감으로 인한 비용효과가 있고, 네트워크 통합으로 중복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화벽서버, 네임서버, 메일 서버는 하나로 통합됨으로써 이 또한 비용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방안은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이 대국민 서비스향상과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국회 전산센터의 장기적이고 최종적인 목표로 제시하였다.

국회 통합전산센터는 전산장비와 네트워크 장비의 통합과 함께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기록보존소도 국회에서 생산되는 중요 데이터베이스가 통합되어 있는 통합전산센터와 함께 있는 것이 국회기록물의 보존관리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며, 각 기관의 자료관도 이 경우는 필요하지 않다. 통합전산센터 내 모든 애플리케이션이 집중되어 각 기관의 자료관 시스템도 통합전산센터 내 있기 때문이다.

국회통합전산센터가 생긴다면 국회통합전산센터 내 정보화를 기획하는 팀과 실제 전산을 담당

하는 팀, 국회기록물을 담당하는 팀으로 구성하는 국회 정보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3〉 국회 내 통합전산센터 운영 시 기록관리 체제정비 방안

결론적으로 통합전산센터는 장비와 네트워크의 통합뿐 아니라 애플리케이션과 데이터베이스의 통합으로 볼 수 있으므로 국회기록보존소를 통합전산센터 내 위치하고 기록물을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 기관의 자료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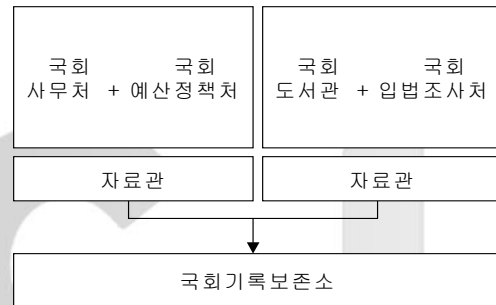
### 3.2.4 전산센터 이원화 방안 중 2+2로 운영하는 방안

전산센터 이원화 방안 중 2+2방안은 국회도서관과 신설예정인 입법조사처가 리서치로 공통된 부분이 있으므로 정보저장 및 검색 등 정보서비스를 고도화 시킬 것을 예상하고,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사무처 공통 정보시스템 인프라를 활용하는 것이 장기적인 통합전산센터로 운영될 때 전체통합에 대한 위험요소를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 효과를 가진 방안이다.

이 방안은 통합전산센터보다는 각 기관별 전산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이 더 근접된 방안으로 기

관별로 그룹화 된 곳에 자료관을 두고 각 그룹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수집하고 국회기록보존소에 이관하여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회기록보존소는 어느 기관에도 소속되지 않고 독립되어 기록물을 이관·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전산센터가 2+2방안으로 운영될 경우 국회 기록관리 체제정비방안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4〉 2+2방안으로 운영 시 기록관리 체제정비 방안

이원화 방안 중 2+2방안은 각 기관이 그룹화 되었으나 전체 구도는 통합보다는 기관독립에 근접한 모델로 국회기록보존소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되어야 하며, 그룹으로 나누어진 기관은 각 그룹마다 자료관을 두고 기록물을 관리한 후 독립된 국회기록보존소에 기록물을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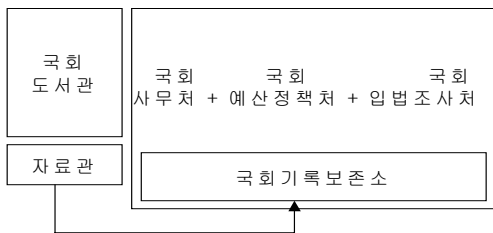
### 3.2.5 전산센터 이원화 방안 중 1+3으로 운영하는 방안

전산센터 이원화 방안 중 1+3방안은 국회사무처를 비롯하여 국회예산정책처, 올해 신설 예정인 국회입법조사처를 하나의 국회사무지원 기능

의 전산센터로 통합하고, 국회도서관은 도서관 자체의 전산센터로 운영한다는 방안으로 단기적인 관점에서 현재의 국회 전산센터 운영 및 유지비용이 가장 최소화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의 현시점에서 국회통합전산센터의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이기도 하다.

이 방안일 경우 국회도서관을 제외하고는 통합전산센터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국회사무처와 국회예산정책처, 신설예정인 국회입법조사처를 하나로 하는 통합전산센터에 국회기록보존소를 연결하여 세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 통합전산센터와는 달리 구분하여 운영되는 국회도서관에는 자료관을 두어 기록물의 유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국회기록관리 체제정비방안으로 타당하다.

전산센터가 1+3방안으로 운영될 경우 국회 기록관리 체제정비 방안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5〉 1+3방안으로 운영 시 기록관리 체제정비 방안

전산센터가 1+3방안으로 운영될 경우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신설예정인 국회입법조사처를 하나로 하는 전산센터는 통합전산센터로 가기 전 작은 통합전산센터로 국회기록보존소가 이 통합센터 안에 위치하고 국회도서관은 도서관 자

체 전산센터로 운영되어 국회도서관에는 자료관으로 두어 기록물을 수집·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 기관에서 생산되는 기록물을 통합센터 안에서 해결하고 도서관은 자료관을 통해 처리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나 관리측면에서 효율적이다.

#### 4. 결 론

현재 국회 기록물 정보화는 정보화를 전담하고 있는 입법정보화담당관실의 인트라넷을 통한 기록업무 이용제공과 국회기록보존소의 기록물 생산 및 보관, 보존매체제작·보존처리·보존평가 등 전반적인 기록 보존업무가 하나의 큰 틀 안에서 진행되기 보다는 독자적으로 분산 추진되어 혼선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국회기록물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기록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조직과 업무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국회정보화와 관련하여 국회입법조사처와 국회통합전산센터 신설이라는 큰 변화가 일고 있는 이때, 국회기록보존소도 개혁의 큰 틀에서 재고되어야 한다. 국회는 한국전자정부연구원에 국회 전산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였고 그 결과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은 네 가지 방안으로 운영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네 가지 전산센터 운영방안을 따라 국회기록관리 체제정비 방안을 고려하면 다음과 같다.

제1안: 각 기관별 별도 전산센터 운영 방안  
 각 기관에서 생산하는 최종기록물을 각 기관 자료관을 통해 수집하고 국회 기록보존소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기관이 되어야 한다. 각 기관의 자료관시스템과 기록물관 시스템으로 연계하여 국회의 기록물이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2안: 국회 전체 통합전산센터 운영 방안  
국회기록보존소는 통합전산센터 내 위치하고 국회 모든 기록물을 통합전산센터 내에서 보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각 기관의 자료관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제3안: 국회 이원화 전산센터 운영 방안 중 2+2방안(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 국회도서관+국회입법조사처)  
기관독립에 근접한 모델로 국회기록보존소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되어야 하며, 그룹으로 나누어진 기관은 각 그룹마다 자료관을 두고 기록물을 관리한 후 독립된 국회기록보존소에 기록물을 이관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4안: 국회 이원화 전산센터 운영 방안 중 1+3방안(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  
통합전산센터로 가기 전 작은 통합전산센터로 국회기록보존소가 이 통합센터 안에 위치하고 국회도서관은 도서관 자체 전산센터로 운영되어 국회도서관에는 자료관으로 두어 기록물을 수집·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한국전자정부연구원의 국회전산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향 연구결과에 따라 네 가지 국회 전산센터 운영방안을 도출할 수가 있었다. 또 이 네

가지 방안에 따라 국회 기록관리 체제정비방안을 검토한 결과 몇 가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국회 전산센터 운영방안이 기관 독립모델에 근접할 경우(1,3안) 국회기록보존소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되어야 한다. 현재 국회 기록보존소는 국회사무처 산하에 3급 기관으로 국회 기록물관리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있다. 국회 기록물을 관리·보존하는 주무관청의 위상이 낮다는 것은 상급기관을 상대로 실제 집행하고 감독한다는 것이 어려울 뿐 아니라 기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국회 전산센터가 완전 통합전산센터(2안)으로 되지 않는 한, 각 기관마다 자료관을 두고 기록물의 유실을 막아야 한다. 자료관은 기록보존소와 처리과를 연계하는 중요한 기록물 수집 기관으로 자료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국회 기록물을 보다 폭넓게 수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국회는 처리과와 국회기록보존소를 직접 연결하여 기록물 수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셋째, 국회기록보존소는 다른 기관 마찬가지로 독립하거나 통합전산센터 내 포함되어도 즉 운영 방안 중 1~4안의 어느 경우라도 주무관청의 기록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관으로 주무관청과 최소한 동급의 위상을 갖거나 아니면 상급의 권한을 위임해 주어야 한다. 현재의 국회 기록보존소의 낮은 위상으로는 국회기록물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국회 전산실이 하나로 통합되는 통합전산센터가 되지 않는 한, 국회 기관마다 자료관을 두어 보다 효율적인 기록물 수집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기관 독립모델일 경우(1,3안) 국회기록보존소는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독립되어야 한다. 또 국회기록보존소는 3급

기관으로는 국회기록물 관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주무관청과 최소동급이나 상급의 권한을 주어야 한다.

국회 기록관리는 행정부 주요기관의 기록관리 처럼 기관과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총

무과 수준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법률규정에 따라 기관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국회기록보존소가 형식적인 면에 머무르지 않고 위에서 지적한 점들을 개선하여 나아간다면 형식뿐 아니라 내실을 갖춘 기록관리 기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양승조. 2004. 국가공공기록물관리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 한국전자정부연구원. 2005. 국회 전산센터 운영 및 향후 발전방향.
- 김재철. 2004. 범정부 통합전산환경 구축사업: “통합운영이 아니라 정부혁신이 핵심”, Computer World 통권254호 : 52-60.
- 이원영. 2004. “기록관리의 중요성과 국회기록관리의 과제”, 國會報 통권448호 : 98-101.
- \_\_\_\_\_. 2003. “국회기록의 관리방안”, 國會圖書館報 제40권 제4호 통권 제290호 : 30-37.
- 코리아와이즈넷 編. 2002. “정보공유 및 기록물의 효율적 검색을 위한 통합검색엔진의 기능과 역할”, 記錄管理保存 통권 제7호 : 165-175.
- 엄문성. 2001. “기록물 전산화 관리 방안”, 記錄管理保存 통권 제6호 : 33-42.
- 이재하. 1999. “기록물 등록관리의 전산화”, 記錄保存 12('99.12) : 175-188.
- International Records Management Trust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공편]; 남성운 역. 2003. “기록관리 전산화 : 공공부문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 진리탐구.
- International Records Management Trust ; 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 [공편] ; 남성운 역. 2002. “기록관리자를 위한 전산시스템: 공공부문기록관리 교육프로그램”, 진리탐구.
- Theodore R. 쉘렌버그 저 ; 이원영 역. 2002. “현대 기록학개론”, 진리탐구.
- 崔貞泰 著. 2002. “記錄學概論”, 아세아문화사.
- 국회기록보존소 [편]. 2002. “국회기록물 및 정보 공개 관련법규”. 국회기록보존소.
- 이원규 저. 2002. “한국 기록물관리제도의 이해 : 한국 최초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체계적 정리”, 진리탐구.
- 신중순 외편저. 2001. “기록보존의 실제 :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현장기술의 총정리”, 세화.